

국토부 “서울 집값 불안 재연땐 추가대책 내놓을 것”

‘8·2 부동산대책’ 시행 1년

청약 과열·집값 불안지역에 불법청약·전매 점검 등 강화

다주택자 주택보유 모니터링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점 둘 것”



8·2대책 발표 1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 시장이 불지핀 서울 여의도와 용산 일대의 아파트 시장은 매물 폭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초강세다.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8·2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어느 정도 진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최근 서울 일부 집값이 다시 상승, 정부는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2대책의 기초 위에 추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

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해당권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필요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담보인정비율)·D 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역시 동반해서 실시한다.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 실현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빠른 시일 내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아울러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며,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광운대역 노후주택, 17층 아파트로 탈바꿈

공공임대주택 설립 심의 통과 사회복지·근린생활 시설 등 입주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 17층짜리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운대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지난해 5월 노원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공람공



광운대역 역세권에 들어서는 17층짜리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서울시

고,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진행됐고,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안이 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구역에는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세워진다. 신축 건물에는 공공임대주택 63세대, 사회복지 시설, 근린 생활시설 등이 입주한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역세권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안과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강남구 대치동 버스차고지 폐지안을 보류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 낮 기온 39도’ 도심 속 아지랑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를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사업시행 전 이촌한강공원 인공 호안(왼쪽)과 사업시행 후 이촌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서울시

“한강 생태계 복원 모습 사진으로 한 눈에”

‘2030한강 자연성 회복 사진전’

한강의 생태환경이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10일 시청 1층 로비 전시공간에서 ‘2030한강 자연성 회복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한강 숲 조성 ▲맑은 물 회복을 위한 자연형 호안 복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한강,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기(2014~2018년), 중장기(2019~2030년) 실행계획을 통해 한강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복원, 생태계점조성 등이 있다. 한강숲 조성은 은난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의도공원의 5배 크기(104만7000㎡)의 숲을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47만5660㎡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감정노동자 정서치유 돕는다

시립병원·자살센터 등 의료기관

서울시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공감서비스 디자인센터를 통해 시립병원, 자살예방센터 등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종사자의 정서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시는 ‘시립병원 직원 대상 폭언 및 폭행 대응 매뉴얼’을 개발, 전 시립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폭언과 폭행상황이 발생하



면 신고·대응·보고 절차를 진행해 유사사고를 막고, 직원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 휴식, 조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서울시 용인정신병원은 ‘감정노동 힐링센터’를 조성했다. 병원 종사자들이 폭언과 폭력으로 감정노동에 지쳤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상 장소인 ‘쉼표’와 카페 ‘따옴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건물 옥상에 ‘마음 풀 정원(사진)’을 설치해 환자, 보호자, 주민 등 누구나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위험군의 상담자들을 24시간 응대해 잠지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늑한 개별 사무 공간을 만들었다. 센터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유가족 힐링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난방용 등유 넣은 관광버스 무더기 적발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관광버스가 적발돼 관련자 총 22명이 형사입건됐다. 경유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 4명, 버스기사 18명 등 관련자 총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경유 아닌 등유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우리 구청 소식

마포구 전신주 대신 파란하늘 ‘도화길 지중화 사업’ 마무리

서울 마포구는 도화길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 상권의 발전으로 전력과 통신 수요가 증가해 도화길에 있는 전신주들의 몸집과 무게가 늘어났다. 이에 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도화길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



해 7월 마지막 남은 전신주 하나를 철거하며 공사를 마쳤다. /김현정 기자